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홍기원
이연희 · 송옥주 · 전용기
허영 · 이해식 · 이해민
김기표 · 황희 · 이성운
박해철 · 김우영 · 박균택
이정문 · 박수현 · 임오경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

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 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 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 <u>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u> <u>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u>

<신 설>

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

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 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

-행정기관의-----

-행정기관의-----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u>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